# 기독일보

2025년 2월 4일 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717호

# "북한인권재단 설립,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하는 것"

### 3일 국회의원회관서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 주제로 정책세미나 개최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행사는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의 주최, 통일부가 후원했다.

행사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실태 및 조기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했다.

제 교수는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8년 6개월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핵심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북한인권재단이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는 수령독재체제하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받으며 노예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주민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그대로 방치 혹은 외면하는 것으로 결국 반헌법, 반인권, 반인도, 반민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자금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20대 국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4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은 북한인권재단 구성의 향배와 관련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의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불배제"라며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 북한인권단체와 관계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좀 더 힘을 내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결함으로써 국회,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 대해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당위성과 관련해서 가능한 모든 홍보 및 소통 수단을 활용,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인권과 관련 있는 모든 주체와 활동가들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고 힘차게 싸울 때 북한인권재단 출범 시기가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 인권에 있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금언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했다.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탈북민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이후에는 사단법인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을 좌장으로, 토론 순서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석우 이사장(북한인권시민연합), 김웅기 이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금순 석좌연구위원(통일연구원), 윤상욱 통일부인권정책관,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헌법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제1조 민주공화국과 제10조 기본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제3조와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이와 같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북한인권)에선 좌도 우도 없으며, 보수도 진보도 없다.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다루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8년 전에 재정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유독 정치 문제화가 되고 있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 COI 위원장도 한결같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줄기의 빛처럼 작년 10월 17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11월에 사건 접수가 되었기에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 이내 판결을 해야 되며, 금년 3월이면 4개월이 되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김웅기 이사는 "통일을 위한 두 당사자 중에서 한 당사자가 통일을 포기한 상태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의 청책은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에 출범을 위해 여야의 협의에 의해 이사를 추천하되, 어느 쪽에서 추천을 거부하면 그 추천권은 상대방에게 주고, 추천을 포기하는 쪽에서는 정책의 감시자로 역할을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금순 연구위원은 "2016년 여야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은 북한인권정책 관련 정치적 입장이 아직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훈령 제651호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제1차 및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증진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국회 여야의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개회사를 전한 박충권 의원은 "2005년 8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었다"며 "그러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10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마침내 제정되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민주당의 이사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 8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이번 토론회가 재단 설립의 지연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 "신학계 좌경화 경향" 자유주의신학 우려 제기돼

### "신학생들 이에 영향 받을까 우려"
### 이성 중시하는 자유주의신학, 선교 개념 혼란 초래
### 일반대 신학과, 교단 견제 없어 자유주의 성향 농후
### 선교적 측면에서 복음의 우선성 약화될 위험성도

최근 신학계에서 자유주의신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혈감리교회 김요환 목사는 SNS를 통해 "신학계가 좌경화되어 특정 견해를 지지하고 반대 입장은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성서학계가 이러한 흐름이 심각하며, 신학생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신학계는 정치적 좌파가 아니라 신학적 좌경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주의신학이 학계의 주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학술회의 및 출판 시장이 자유주의신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도 특정 신학적 관점이 우선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문 장학금 수혜자들의 연구 주제는 종교 간 대화나 종교다원주의, 해방신학 등이 많다"며 "반면 복음주의 신학 연구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남신대 선교신학 안승오 교수는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경을 볼 때, 이성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한다"며 "전통적으로 신학을 할 때 이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성을 상당히 중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계시보다 이성을 더 앞세우는 것이 자유주의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그 다음으로 세상의 어떤 흐름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 흐름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고 조화를 이룰 것인지 생각하며,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다"며 "우리의 이성을 잘 활용하고 논리·적합성을 가져가는 것은 선한 의도이며, 자유주의라는 그 의도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다 설명해 낼 수 없다는 것에 있다"고 했다. 또한 "이성으로 설명해 낼 수 없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신학도 하나의 학문이다 보니 신학자들도 세속적인 학술기관에 글을 내고, 책을 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 이성에 맞지 않거나 세상의 문화적 흐름과 맞지 않으면 신학자로서 굉장히 입지가 곤란해진다"며 "그래서 결국 처음 시작은 성경을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신학을 하려다 보니 이성과 세상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 성경보다 아래에 있어야 할 이성이 성경 위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성경을 이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위에 신학을 만들어내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많은 신학교들이 처음엔 복음주의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신학교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자유주의적 경향을 보인다"며 "다만, 여전히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들은 교단의 큰 흐름이 있기에 막 나가지 못한다. 반면 일반대학은 이러한 견제 장치가 없어 상대적으로 제한을 덜 받는다. 그러다 보니 일반대학 신학과의 경우 훨씬 더 자유주의신학적 성향이 농후하다"고 했다.

안 교수는 "선교신학적으로 복음전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며,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이라며 "그런데 자유주의적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 '꼭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최우선이겠는가, 오히려 윤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구분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교는 복음전도를 핵심으로 하며, 그 다음으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리적인 책임을 선교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것이 선교적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교의 개념 자체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라는 것은 그 시대와 상황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당시 조선의 윤리로 볼 때, 조상에게 제사를 안 드리고, 임금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기독교적 가르침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따랐다. 이러한 상황에 조선으로 온 선교사들이 과연 복음과 윤리적 책임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두고 보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았느냐. 만약에 그 선교사들이 복음과 윤리적 책임을 동등 선상에 두고 보았다면 아마 복음전도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저항이 있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기독교는 윤리를 중시하되, 복음전도의 사명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관점으로 오랜시간을 지내왔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 자유주의적 신학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복음전도의 우선성이 약화되고, 선교를 하나의 복지·윤리·환경·인권 운동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많이 약화되고 있고, 이는 신학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이찬수 목사, 주일 설교 중 시국 관련 내용 해명 » 4면

GCR "작년 한 해 220만여 그리스도인 지원" » 7면